

설 성묘 때 산불 조심하세요

전남 올해 산불 8건 발생
설 연휴기간 눈·비 예보 없어
건조특보 속 위험성 높아
산림청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림청은 설 연휴 기간 눈·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불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림청은 설 연휴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지난 27일 기준 올해 발생한 산불 건수는 8건(피해 면적 2.3ha)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2배(4건), 피해면적은 9배(0.27ha) 많은 수치다. 지난 10년간(2009~2018년) 평균은 1.8건(0.8ha)이다. 광주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올해 83건이 발생해 43.36ha가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에는 21건, 피해면적 84.52ha으로 10년간 평균은 23.8건, 20.36ha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남 동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북, 경상도 지역에 2달 가까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으로 산불 등 각종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특히 설 연휴 기간에도 눈·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날씨가 전망되면서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10년간 설 연휴에 산불은 총 70건

이 발생했으며, 이 중 명절 다음날이 36%로 가장 많았다. 원인으로는 소각산불이 19건, 성묘객 실화 및 입산자 실화가 각각 17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올해와 비슷한 기상을 보인 지난해에는 설 전후 3일간 29건의 산불이 일어나 산림 14ha가 소실됐다. 최근 들어 겨울철 적설량이 감소하면서 겨울철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 등 각 지역의 산불상황실은 24시간

상황관리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감시원과 예방진화대 등 2만2000 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 감시활동과 소각행위 계도 단속에 나선다.

또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헬기와 임차헬기 등 진화헬기 157대의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고성, 속초, 삼척 등 동해안에는 산림헬기를 전진배치해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예방진화대 1만 명과 공중·특수진화대

400명은 상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야간산불 등 적극대응을 통해 산불확산을 방지한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전국적인 건조특보 발령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성묘를 다녀오거나 산행시 산불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만일 산불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9나 자치단체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영산강환경정, 설 연휴 특별 점검활동

영산강유역환경정청이 설 연휴기간(2월 4~6일)을 맞아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취약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월13일까지 특별 점검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1월~2월1일)에는 염색·도금 등 폐수 다량배출업체, 미세먼지 배출업체,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유해폐기물 취급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2월 2~6일)에는 영산강·섬진강 상수원 수계와 환경오염 우려지역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후(2월 7~13일)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폐수 무단배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는 시민들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정 상황실(062-410-5115)로 신고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주암호 등 상수원관리지역 133억 지원

영산강유역환경정청은 주암호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해 '2019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총 133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지원사업비는 총 107억원으로, 마을공동창고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213개)에 20억원, 상수도시설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210개)에 19억원, 장학기금 적립·운영 등 육성사업(67개)에 2억원, 가계 생활비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6440가구)에 66억원을 지원한다.

특별지원사업비는 26억원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보성군 울어면 행복목욕장 건립사업 등 신규 7개 사업에 23억원과 2018년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17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상·하류 주민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21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그동안 규제를 받는 주민과 마을에 대해 주택 개량, 전기·의료비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과 마을안길·농로 정비, 소득작물 재배시설 설치 등 간접지원사업을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화관법 위반 사업장 후속조치 집중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정청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사업장의 영업허가 요건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화관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후속조치 이행기한이 오는 5월21일 끝나는데 따른 조치다.

영산강환경정청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장 229곳 중 요건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은 181곳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

영업허가 요건은 기술인력 확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이다.

환경정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을 독려하고 법규·환경부 고시·훈령·예규 등을 정리한 '화학물질안전관리규정집'을 제작, 배포한다.

또 다음달부터 한달 간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허가 진행상황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환경정은 전수조사를 통해 미비사항 확인, 개선 요청할 계획이다. 기한 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장성 고려시멘트·광양 포스코·여천 NCC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자발적 감축 나선다

환경부, 51개 사업장과 협약

장성 고려시멘트, 광양 포스코제철, 여천 NCC 등 29개 업체 51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지역에서는 장성 고려시멘트, 광양 포스코제철, 여천 NCC,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등 다수 사업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연간 33만 6066t의 17%를 차지하여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장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3만 3173t,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는 5694t, 제철업종 2개사는 1만876t, 시멘트제조업 9개사는 6555t으로 이들 사업장의 배출량(5만

6298t/년)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155t/년)의 31%를 차지한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방안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 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 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에 PM 2.5 미세먼지 농도 자동측정기 설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

가격 저렴·신속 수리 장점

국내 기술로 제작된 PM 2.5 미세먼지 농도 자동측정기가 광주에 설치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PM 2.5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 등 전국 대기오염 측정소 443곳에서 쓰이는 미세먼지 농도 자동측정기는 모두 외국산이었다.

새로 개발한 국산 장비는 여과지에 채워진 먼지를 베타선(beta-ray)이 통과할 때 흡수되는 베타선의 세기를 측정해 대기 중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를 측정한다.

장치 내로 유입된 공기에 빛을 쬐다 음 미세먼지에 의해 산란된 빛을 감지해 질량 농도를 환산하는 저가의 센서 방식과는 다른 정밀 측정 방식이다.

세계 점유율 1위 제품이 1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것과 달리 이 제품은 5분 단위 측정이 가능하다.

초기 구축비용은 기존 외산 장비가 대당 2500만원, 국산 장비가 1500만원 수준이어서 저렴하다. 국산인 만큼 신속한 수리도 장점이다.

환경부는 장비 국산화로 올해만 약 31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인천시 교육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에 납품이 이뤄졌고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11억(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은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

문의. 010-6834-7400